

발포 명령자·헬기사격 등 5·18 총체적 진실 밝힌다

국회의원 88명 서명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헬기 기총사, 최초 발포 명령자, 집단학살·암매장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는 토대가 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특별법)이 발의됐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됐지만, 5월 진상 규명에 방점이 찍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진상이 훼손당해 왔다"며 "정부차원에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5·18특별법'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1988년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며 국립묘지 조성, 피해자 보상 등이 이뤄졌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국가 공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된 상황이다. 또 광주에는 5·18단체·법조계·시민단체 등 343개 단체가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있지만 명예훼손 고소 등 민간 차원으로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5·18특별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 등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시민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

포 책임자·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암매장지와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그동안 5·18을 왜곡하고 폄하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허구임을 밝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5·18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월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에서 여·야당이 조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文대통령 내각 구성 '숨고르기'

송영무·조대엽 장관 임명 보류... "추경, 인사 문제·정치 연계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물 밑 대화로 장관 임명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완화되고 7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총심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남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지명 철회하고 야권이 이를 받아들여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몰고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일각에서는 야당의 입장이 아직 강경하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와대가 이번 주 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야권의 반발을 고려, 임명을 늦추긴 했지만 사실상 장관 인사와 정국 현안과의 연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각각 장관직에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독일에 서 전자결재로 정 장관을 임명했고 어제(10일) 저녁에 유 장관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대법원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중단되게 됐다. 담양군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담양군 학동리 일대에 조성 중인 메타프로방스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양메타프로방스 사업 제동

대법원 "토지 수용 요건 못갖춰...사업 승인 무효 정당" 사업 80% 진행 마무리 단계...영업 상인 피해 불가피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대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미 8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판결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대법원은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이들이 전남도지방법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 인가 단계에서부터 잘못됐으니 원점으로 되돌아가라는 의미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 기간에 사업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이 회사는 사유지 전체면적의 약 59%만 확보하는데 그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이를 토대로 인가처분한 것 또한 중대·명백한 하자여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 시행자는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조성된' (공사가 완료된) 것이어야만 처분될 수 있다"며 "디자인프로방스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주요 공익시설 등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점은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척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중단돼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현재 영업 중인 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어온 상인들은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다.

소송에서 이긴 원고도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토지반환 요구 소송과 건물 철거 요구 소송 등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행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3개월 뒤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서히스타힐스 STARHILLS

축 각화 서히스타힐스 2017년 상반기 한경주거문화 대상 "지역주택조합 대상" 수상

광주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역주택조합 명품브랜드! 서히스타힐스가 광주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역주택조합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각화 센트럴파크 서히스타힐스 착공식

일시: 7월 15(일) 오후 3시 장소: 각화동 신축공사 현장

문흥 센트럴파크 서히스타힐스 062)266-9926

조합설립인가 완료 예정! (2차 조합원 상담중)

신첨단 프라임시티 서히스타힐스 062)265-0222

첨단 700만원대 선착순 조합원 모집중! (발코니 확장 무료)